

# ‘부산광역시 구·군 인권행정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부산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부산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하는 주체로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 1-6 ‘시·자치구 인권협력체계구축’의 추진 및 실천을 위해 구·군 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천, 인권전담기구 및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강서구를 포함한 6개 구에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제정을 독려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기본조례」는 제정하였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북구를 비롯한 4개 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수영구를 포함한 4개 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관리 및 지원해야 합니다.

2. 부산시는 조례에 기반하여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인권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인권전담자는 부서 내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

3.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4조의 2에 규정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인권실태 파악을 구·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군에서 인권보호관 채용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유효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부산시는 구·군과 인권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군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월 10일 전후 진행하는 인권주간이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 모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부산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2020~2024) 과제1-6 ‘시·자치구 인권협력체계구축’

## □ 권고 배경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12년 12월 22일,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 및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부산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

3.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2019년 1월에서야 인권전담부서를 출범시킨 후(민생노동정책담당관실 아래 인권노동정책과, 인권증진팀 구성), 2020년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21년 9월 인권보호관 채용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12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개소하여 기본적인 인권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 이러한 인권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인권행정을 앞서 실천해 왔던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 큰 자극과 기대를 주어, 2024년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도시로 선정되었고, 타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견학을 오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4. 이 같은 부산시의 신속한 인권행정구축과 달리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2년 11~12월 두 달간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현황조사 결과는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12월 9일 개최한 부산광역시 및 구군 인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시-구·군 인권위원회 워크숍 정례화를 비롯하여 구·군 인권행정체계 강화를 위한 구·군 인권 전담 직원 확보 등 부산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조례제정 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위원회와 거버넌스를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상기시켜 보면, 구·군의 인권행정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시장 및 구·군의 단체장을 비롯하여 책임 있는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 □ 권고 사항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의 인권행정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광역시에 권고합니다.

1. 부산시는, 시 산하 16개 구·군의 인권행정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6개 구·군의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구·군 별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구성을 관리·지원해야 합니다.

2. 부산시는,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 조례에 기반하여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인권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3. 부산시는, 구·군 인권담당자와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인권행정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 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시-구·군 정례 간담회도 추진해야 합니다.

3. 부산시는, 「인권기본조례」 제4조의2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규정에 근거하여, 구·군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인권침해 구제체도를 구·군이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부산시는, 구·군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5. 부산시는, 인권주간을 통해 인권 문화가 구·군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 문화행사를 구·군과 협력하여 수립하고, 인권주간이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 모두의 인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부산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대표적인 인권도시로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 불임자료 (부산시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현황 표)

□ 불임자료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현황 (2022.12.31. 현재)

< 표 : 인권조례 제정 /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권보호관 / 인권교육 >

구군	조례 제정 (최근 개정)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구성	부서 및 인권전담자	인권 보호관	인권교육 진행	인권 행사
부산시	2012.02.22. (2022.12.28)	○ (2020~2024)	제5기 14명 (21.2.20~23.2.19)	민생노동정책과 인권증진팀 (3명)	○ (1명)	○	○
<b>16개 구·군</b>	<b>10</b>	<b>6</b>	<b>4</b>		<b>1</b>	<b>5</b>	<b>1</b>
1 부산진구	2013.04.09. (2021.12.13.)	○ (2020~2024)	제4기, 12명 (21.4.15~23.4.14)	행정자치과 (구민소통계)	○ (1명)	○	○
2 기장군	2016.03.25.	○ (2023~2027)	제4기, 14명 (22.9.22~24.9.21)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	-	○	-
3 해운대구	2010.11.22. (2018.02.22)	○ (2019~2023)	제6기, 16명 (22.11.23~24.11.22.)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	-	○	-
4 중 구	2012.11.09. (2019.12.16.)	○ (2019~2023)	14명 (21.4.30~23.3.29)	총무과 (자치행정계)	-	-	-
5 연제구	2015.07.20. (2020.02.04)	○ (2019~2023)	- (제1기 임기만료 후 미구성)	자치지원과 (행정계)	-	○	-
6 수영구	2010.12.15. (2022.8.1.)	○ (2022~2025)	-	기획전략과 (기획정책계)	-	○	-
7 북 구	2012.03.12. (2020.06.03)	-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	-	-	-
8 남 구	2011.05.06. (2022.10.7.)	-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	-	-	-
9 사상구	2013.09.17. (2015.10.22.)	-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	-	-	-
10 사하구	2015.02.17. (2022.5.16.)	-	-	총무과 (자치행정계)	-	-	-
11 강서구	×			-	-	-	-
12 금정구	×			-	-	-	-
13 동 구	×			-	-	-	-
14 동래구	×			-	-	-	-
15 서 구	×			-	-	-	-
16 영도구	×			-	-	-	-

① 순번은 16개 구·군의 인권행정체계 구축현황에 따른 순위임.

-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1~10 구·군 중 1~7 구·군은 인권행정체계 구축현황에 따른 순위
- 8~10의 구는 가나다 순
- 인권기본조례가 미제정된 11~16 구도 가나다 순

② 부산진구를 제외 한 15개 구·군에서 인권전담자는 부서 내 다른 업무 겸임하고 있음.